

저소득층 자산보유 실태와 과제

- 복지패널 2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보면 절대 자산빈곤율은 13.3%, 상대 자산빈곤율은 29.3%인 것으로 나타나, 소득빈곤율보다 더 높은 수준임

- 자산빈곤가구는 일반 가구와 다른 특성이 존재하므로 현 지원기준의 재검토를 통하여 빈곤가구의 재산형성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 연구의 필요성

- 국제금융 위기의 진전으로 인한 소득 및 자산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빈곤계층의 자산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 기존의 빈곤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이 소득빈곤에 관한 연구들이며 자산빈곤에 관한 기초분석 결과는 충분하지 않음
 - 선행연구에 따르면 자산은 소득에 비해 불평등도가 높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견됨
- 여기서는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소득계층별 자산보유 실태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자 함
 -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그리고 차상위계층(near poor)의 규모와 실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하여 '최저생활보장 및 일을 통한 탈빈곤'이라는 세부 정책목표를 전략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 아울러 저소득층의 자산축적을 통한 탈빈곤 복지정책의 정착을 통하여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자산은 소비평활화 기능이 있으므로 가계가 불완전한 자본시장이나 차입제약에 직면해 있을 때 큰 중요성을 지님(Caner and Wolff, 2004)
 - 가령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조만간 소비지출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거나, 은퇴시점이 가까워져서 조만간 소득의 감소가 예상된다거나, 또는 예상하지 못한 외적인 충격으로 인하여 소비 또는 지출 수준이 영향을 받을 경우 자산은 소비수준을 평활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판별을 위해 이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은 가구의 소득과 자산 정보를 모두 필요로 하므로 소득기준의 빈곤계층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자산 기준의 빈곤계층에 대한 연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

- 빈곤 가구의 순자산을 파악함으로써 가구 재정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부채를 고려할 수 있는 순자산에 중점을 두어 빈곤계층의 자산보유 실태를 분석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자 함

2.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실태

- 소득빈곤은 크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절대빈곤은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구분하며, 빈곤·차상위·차차상위 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표 1〉 절대빈곤 계층의 구분

구분		소득인정액 기준
빈곤	절대빈곤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비빈곤	차상위	최저생계비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20%
	차차상위	최저생계비 × 120% < 소득인정액 < 최저생계비 × 150%
	일반	최저생계비 × 150% < 소득인정액

- 절대빈곤가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으로 정의되며, 차상위는 최저생계비 100% 이상 120% 이하, 차차상위는 120% 초과 150% 이하인 가구로 정의됨. 소득인정액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가구로 분류함
- 상대기준은 연구자의 선호나 연구목적에 따라 중위소득의 40%, 50%, 60%를 기준으로 보고 가구소득이 기준선 미만이면 소득상대빈곤가구로 정의함
-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2차 자료를 중심으로 저소득가구의 소득과 자산보유 실태를 파악함
- 한국복지패널 2차, 3차의 전체 표본가구를 절대 및 상대적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체 가구 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 절대소득빈곤가구는 2차 전체가구의 10.2%, 3차 전체가구의 9.5%로 3차의 절대빈곤율이 다소 낮으며, 차상위, 차차상위 가구의 비율은 그보다 낮음
 - 상대빈곤가구는 절대빈곤가구의 비율보다 높으며, 중위소득 40% 기준으로는 2차 14.7%, 3차 14.8%임
- 소득빈곤과는 달리 자산빈곤을 정의하는 방법은 명확한 기준이 없으므로 소득빈곤의 개념과 유사하게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기준을 정의함
 - “일정기간동안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산유형(wealth-type)을 가지지 못한 가구” 라는 Haveman and Wolff(2001)의 개념을 기본으로 가구의 자산이 6개월간 최저생계비 보다 적은 경우 절대자산빈곤가구로 봄

-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순자산 중위값의 40%, 50%, 60%에 미달하는 가구로 각각 정의함
- 복지패널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절대자산빈곤 가구는 전체가구의 13.3%이며, 순자산 중위수의 40%로 정의한 상대자산빈곤 가구는 29.3%임
 - 유사한 개념의 절대소득빈곤율이 10.2%, 상대소득빈곤율이 14.7%인 것과 비교하면 자산빈곤가구가 소득빈곤가구 보다 더 빈곤율이 높음
-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지역 등의 구분에 따른 자산빈곤 현황을 살펴볼 수 있음
 - 70대 이상 가구의 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으며, 70대 이후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높아짐
 - 가구주 교육수준이 '무학' 인 경우 빈곤율이 27%로 가장 높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각 그룹에서 빈곤에 포함되는 비율이 낮아짐
 - '서울' 지역 빈곤율이 9.9%로 가장 낮으며, '전라·제주' 지역이 19.3%로 가장 높음
 - 지역별로 구분한 경우와 동일하게 '서울' 지역 빈곤율이 가장 낮으며, '광역시' 의 빈곤율이 15.8%로 가장 높음
 - 1인가구의 빈곤율이 26.1%로 가장 높고, 가구원수가 많은 경우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가구주가 '일용직' 인 경우의 빈곤율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고용주' 일 경우 3.6%로 빈곤율이 가장 낮음
 - 가구주가 '단순노무직' 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의 빈곤율이 21.7%로 가장 높으며, '전문직' 인 경우 2.8%로 가장 낮음

〈표 2〉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빈곤 가구의 분포

		전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계
전체	가구(수)		2	203	1,109	1,319	1,029	1,340	1,212	352	14	6,580
	가중치(%)		[0.2]	[3.8]	[23.0]	[25.1]	[16.7]	[16.7]	[11.5]	[2.9]	[0.1]	100.0
빈곤	가구(수)		0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1,163
	가중치(%)		(0)	(14.8)	(10.0)	(14.9)	(13.1)	(9.9)	(17.1)	(27.5)	(37.1)	(13.3)
일반	가구(수)		2	173	970	1,051	837	1,155	976	245	8	5,417
	가중치(%)		(100.0)	(85.2)	(90.0)	(85.1)	(86.9)	(90.1)	(82.9)	(72.5)	(62.9)	(86.7)

주: [] 내 수치는 행 구성비임

- 전체 가구를 자산빈곤과 소득빈곤의 기준을 적용하여 2차원으로 구분하면 소득기준으로는 비빈곤가구이면서 자산기준으로는 빈곤에 속하는 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들 가구는 소득빈곤이며 자산빈곤인 가구에 비해 소득과 총자산은 많지만 부채가 많아 순자산이 오히려 적게 나타남

〈표 3〉 가구주 연령대별 소득 및 자산보유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가구(수)	30	139	268	192	185	236	107	6	
가중치(%)	0.6	2.3	3.7	2.2	1.6	2.0	0.8	0.0	
소득	근로	1,438.7	1,127.9	780.7	687.2	254.3	35.5	22.0	44.3
	사업	104.3	96.4	192.4	211.3	68.0	35.1	22.5	0
	재산	0	0.5	1.4	4.9	5.1	3.1	3.9	0
	공적이전	54.3	100.2	138.3	174.9	211.5	217.8	153.2	137.1
	사적이전	192.2	77.1	96.0	138.6	179.7	285.0	315.9	347.6
	경상	1,789.6	1,402.1	1,208.9	1,217.2	718.6	576.4	517.5	529.0
자산	부동산	196.5	514.4	676.4	751.3	690.8	157.8	54.5	0
	금융	445.9	226.9	122.2	137.0	65.2	44.0	65.0	132.1
	기타	180.0	132.5	63.5	56.1	43.2	8.5	0.8	0
	총자산	822.5	873.9	862.1	944.5	799.2	210.3	120.3	132.1
	총부채	1,006.4	2,102.7	2,198.6	2,583.5	1,557.2	391.8	74.1	0
	순자산	-183.9	-754.5	-909.0	-883.8	-469.7	-172.0	46.2	132.1

-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기준과 소득인정액 기준, 자산빈곤의 기준으로 가구를 구분하면 비수급-수급대상 자산빈곤가구의 순자산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부분의 경우 해당가구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수급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임

3. 저소득층 자산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 저소득가구에 대한 순자산 불평등의 요인 분해를 통해 계층별 불평등도 및 지역·교육별로 세분화하여 불평등도를 분석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소득계층별 불평등도는 절대빈곤계층이 가장 높고, 일반계층으로 갈수록 불평등도는 낮아짐
 - 각 그룹내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기여하는 비율은 94.4%로, 그룹간 불평등도의 상대 기여도 5.6%에 비해 매우 높음
 - 지역별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시’가 1.672로 가장 높고, ‘군’ 지역이 1.280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는 ‘서울’ 지역에서 42.5%, ‘시’에서 39.1%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 지역권별로 불평등도를 비교하면 ‘충북’ 지역이 가장 높고, ‘경기’ 지역이 가장 낮음
 - 상대기여도는 ‘서울’이 42.5%로 가장 높고, ‘경북’ 지역이 3.9%로 가장 낮음
 - 대부분의 지역에서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일반계층보다 높음
 - 저소득층의 지역별 불평등을 분해하면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불평등도가 가장 높은데, 이는 저소득계층 내에서의 자산 격차가 매우 큼을 의미함

- ‘경남’, ‘경북’, ‘전라·제주’ 지역은 저소득층과 일반계층 간의 불평등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충남’, ‘충북’ 지역은 일반계층의 불평등도가 더 큼
- 가구주의 교육수준에 따른 불평등도는 ‘중졸’, ‘고졸’, ‘대학원졸’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상대기여도를 보면 ‘대졸’ 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고졸’, ‘중졸’ 의 순임

4. 저소득층의 자산 보유 결정요인

- 순자산보유액을 종속변수로, 독립변수로 가구주 연령, 금융자산보유 여부, 경상소득, 가구원수, 전문직 여부, 자영업 여부, 도시거주 여부, 주택보유 여부 등을 이용하여 저소득층의 자산보유 결정요인을 중위회귀(median regression)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구주연령이 올라갈수록 순자산은 체감적으로 증가함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가구주 연령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하며, 이는 자산빈곤이 전 연령대에 걸쳐 나타남을 의미함
 - 금융자산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순자산이 많음
 - 경상소득은 순자산 규모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순자산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종속변수가 가구원수로 균등화된 순자산임을 감안할 때 전체 표본에서는 순자산이 가구원수의 제곱근보다 적게 증가하는 것을 의미함
 - 자산빈곤가구와 비자산빈곤가구로 각각 구분한 경우에는 가구원수의 변화가 순자산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가구원수가 순자산 축적이 가구원수의 제곱근에 비례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됨
 - 균등화 시키지 않은 순자산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면 자산빈곤가구의 경우에 있어서만 가구원수 증가가 소득 창출을 통하여 자산 축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주가 전문직 및 자영업에 종사할수록 순자산은 증가함
 - 자산빈곤가구의 경우 이들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희소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갖지 못함
 -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비도시거주자에 비해 순자산을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5. 요약 및 시사점

- 자산빈곤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소득과 순자산이 모두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 이유는 이들 가구는 충분한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소득의 대부분을 가계 지출에 충당하기 때문에 소득이 자산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임

- 전체 가구를 빈곤계층·차상위·차차상위·차차상위 이상 계층으로 구분한 다음 순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를 한 결과에 의하면 빈곤계층 내의 순자산 불평등이 가장 높고, 차상위계층이 그 다음으로 나타났음
 - 이들 계층은 계층 내 순자산불평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가구에 대한 가구비중이 미미하여 전체가구에 대한 불평등 기여도는 오히려 차차상위계층 이상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사회 전체의 순자산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곤계층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산형성 지원 정책의 불평등 완화 효과는 기대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수급기준은 가구의 재산보다 소득에 대부분의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현재 소비에 충당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해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그런데, 현재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약간의 소득은 존재하지만 재산 자체가 적고 빚이 많은 가구에겐 수급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나, 소비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이 많더라도 현재 소득이 적은 가구에겐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자산빈곤가구가 일반가구와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자산빈곤가구의 특정 연령계층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빈곤완화정책은 전체적인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아동발달계좌 등 보편적 형태의 제도설계를 통해 공평하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빈곤가구의 자산축적을 위해 고용창출이 중요하므로, 이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함
 - 도시에 거주하는 자산빈곤가구의 주택마련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임대료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대책을 통해 점진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강력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부양의 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비수급 자산빈곤층을 제도 안으로 포함 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부록] 선행연구의 요약

- Davies and Shorrocks(1999)는 1980년대 중반 몇몇 국가들의 가계자산 집중도를 정리하고 있는데, 자산불평등이 낮은 국가로는 호주, 한국, 아일랜드, 일본, 스웨덴 등임
 - 이들의 지니계수는 0.5~0.6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상위 1% 가계의 자산점유율은 대략 20% 정도임
 - 그 다음으로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은 상위 1%가 자산의 약 26% 정도를 가지고 있음

- 한편 미국의 지니계수는 0.8 수준으로 자산불평등이 가장 높은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의 자산점유율은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들은 또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stylized facts of wealth distribution)' 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음

- 소비지출, 총소득, 근로소득 분포와 비교해 볼 때 자산분포는 이들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선진국의 소득 지니계수는 0.3~0.4 이지만, 자산 지니계수는 0.5~0.9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
 - 또한 상위 1%의 가계 또는 개인의 소득 점유율은 10%를 넘지 않지만 상위 1%의 자산 점유율은 15~35%에 이르고 있음
- 금융자산은 비금융자산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주거용 자산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금융자산의 불평등도가 더 높음
-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더욱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음
-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매우 낮은 수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가계나 개인이 존재함
- 20세기에 있어서 자산분포의 불평등은 대체로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자산분포의 정형화된 사실을 모두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 모형은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음

□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자산분포 연구로는 Leipziger, et al.(1992)을 들 수 있음

- 1988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4,291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1988년 총자산 Gini 계수가 0.58임을 밝힘
- 이들에 따르면 자산상위 1%, 5%, 10%의 점유율은 각각 19%, 37%, 그리고 48%인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집중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지보유인데, 1988년의 경우 상위 25%의 토지보유자들이 총 토지자산 가액의 90%를 소유하고 있었음 (Leipziger, et al., 1992, p. 46)

□ 이정우 · 이성림(2001)은 대우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자산의 분배를 추계하였음

- 외환위기 이전부터 순자산의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서는 최하위층의 부채가 급증함
- 그 반면 최상위층에서는 순자산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은 부동산자산이었음

□ 김진영(2002)에서는 1993~1998년간 대우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구성 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고 있음

- 우리나라 가구 자산구성의 일반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 자산구성이 가계의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크게 반영하고 있는 점 외에도 부동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산보유 불평등 정도는 부동산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와 금융자산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모두 소득불평등보다 더 높게 나타남을 발견하였음

- 남상호(2007)는 1999~2004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 보유 현황과 분배구조를 분석하였음
 - 자산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비중이 대단히 높고, 순자산 분포는 소득에 비하여 집중도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자산보유 불평등이 심화되는 외에도 자산보유 양극화도 꾸준히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자산빈곤계층 귀속요인을 살펴본 결과 가구의 소득과 취업자 수가 많을수록, 주택을 보유한 가구일수록 빈곤계층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유경준(2007)의 소득불평등도에 대한 개념인식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기본가정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 시점에서 상대적 소득불평등도의 증가 보다는 절대적 소득불평등도(즉, 절대적 소득격차)의 변화에 대하여 좀 더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것을 발견함
 -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그 변화의 양상이 절대적인가 상대적인가 여부에 따라 성장과 빈곤변화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함
 - 국가 발전을 위한 전략을 설정함에 있어 빈곤감소적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소득분배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함을 권고하고 있음
- 남상호(2008)에서는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KLIPS) 2~9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불평등을 분석하였음
 -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순자산과 총소득의 지니계수는 0.731과 0.438로 나타났으며, 총소득과 순자산간의 상관계수는 미국(0.49)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0.313 이었음
 - 또한 2006년을 기준으로 상위 1%계층이 순자산의 16.7%를 가지고 있으며, 상위 5%는 39.8%, 그리고 상위 10%는 절반을 넘는 54.3%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순자산이 소득보다 집중경향이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부유층 집중현상이 상당히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 최근의 가구 순자산 불평등도를 구성요소별로 분해해 본 결과 부동산자산의 불평등기여도가 가장 높았음을 지적하고 있음
- 남상호·권순현(2008)에서는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중·고령자가구의 자산분포 현황 및 구성 분석,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자산빈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음
 - 우리나라에서도 소득보다 자산의 집중도가 높고, 가구주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빈곤층에 속하는 비율이 높아짐을 발견함
 -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자산빈곤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 여성, 월세, 5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높고, 교육수준, 소득수준, 건강수준이 높거나 자가를 보유한 가구는 자산빈곤층에 속할 확률이 낮음을 발견하였음

남상호(기초보장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0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